높은예금 금리(연7.76%)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200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신입생 2008.12.1~2009.1.7
편입생 2008.12.1~2009.1.14

제1824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12월 17일 (음력 11월 20일) 수요일

현직 부장검사 민원인에 피습

광주지검 사무실서 흉기 맞아 부상 … 초유의 사건 '충격'

범인은 사건 처리 불만 40대 남자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자가 검찰 청사 내 사무실에서 현직 부장검사에게 철제 공구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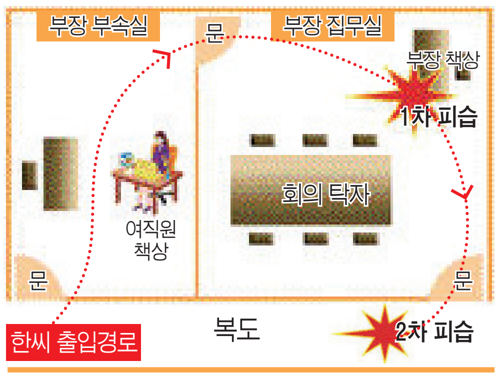
그동안 검사나 검찰 수사관에 대한 협박은 종종 있었으나, 검찰 청사 내 사무실에서 부장검사에 대한 테러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7면〉

16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검 특수부장실에서 한모(47)씨가 소지하고 있던 철제 공구로 이모 부장검사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공구에 맞은 이 부장검사는 직원 승용차로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후송돼 얼굴과 머리에 8바늘을 꿰맸으며, 한때 의식까지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는 사건 현장 바닥이 흥건해질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으나, CT촬영 결과 두부에는 손상이 없어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한씨는 최근 검사 5명을 직무유기로 진정을 제기했지만, 이 부서에서 '공람 종결'(내부 검토 후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것) 처리하자 다시 고검에 항고했으며, 이날 7층 광주고검에서 면담을 마치고 나온 뒤 같은 층에 있는 이 부장검사실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지검 부장검사 피습 상황도



한씨는 부장검사실 여직원의 제지를 뚫고 사무실로 들어가 "증거가 충분한데 왜 공람 종결하느냐"고 항의를 하는 등 이 부장검사와 승강이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 부장검사가 "면담 신청서를 작성하고 오라"고 하자 곧바로 소지하고 있던 철제 공구를 휘둘렀다.

한씨는 사무실에서 흉기로 한 차례 이 부장검사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뒤늦게 달려와 이를 말리던 여직원과 이 부장검사를 복도로 끌고 나오면서 흉기를 수차례 더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씨는 여직원의 비명소리 등을 듣고 달려나온 다른 검사실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혀 구치감에 입감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배당하고, 한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흉기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명관 차장 검사는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억울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부장검사로서 소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자칫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청사 방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권일·안현주기자 cki@kwangju.co.kr

대파값 폭락 … 우울한 農心

16일 해남군 문내면 가루리 들녘에서 겨울대파를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바쁘다. 그러나 올해 작황 호조로 대파값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 떨어진 1㎏당 400원에 출하돼 농민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교과부·국세청 1급 간부 일괄 사표

고위 공직자 물갈이 신호탄?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의 1급 상당 고위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6일 알려지면서 새 정부 들어 끊임없이 거론돼온 고위 공직자들의 물갈이 인사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본부와 산하기관의 1급 간부 7명 전원이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교과부의 1급 간부는 본부 내 기획조정실장, 인재정책실장, 과학기술정책실장, 학술연구정책실장 등 4명을 비롯해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서울시부교육감,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7명이다.

교과부 내에서 이처럼 1급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세청에서도 지난 주말 정병춘 차장과 김갑순 서울지방청장, 조성규 중부지방청장 등 1급 간부 3명이 모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는 이들 국세청 1급 간부의 후임자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관가에서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적 쇄신론' 또는 '물갈이설'이 잇따른 점 등을 들어 두 기관에서 표출된 1급 간부들의 일괄 사표가 전체 중앙부처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관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일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교육부 1급 일괄사표 제출은 부처 차원에서 장관의 책임과 판단하에 이뤄진 것으로, 관련 수석실에서도 진행상황을 잘 몰랐다"면서 "특정부처, 교육부에서 한 것을 다른 부처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비약"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경우를 일반화시켜 전체 고위공무원단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도 1급 3명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지적에 대해 "연말이 돼 인사수요가 생겨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쌍화탕' 광주선 200원·목포선 1000원

광주·전남 약값 지역 따라 천차만별

가격 표준화·위반 땐 강력 단속해야

감기 증상 초기에 약국에서 흔히 사먹는 광동제약의 '쌍화탕(100㎖)'. 광주시 서구 최저가는 200원에 불과했지만 목포와 영광지역에서는 최고 1천원에 판매되고 있어 5배 차이를 보였다.

중풍과 간질 등 응급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시골노인들의 상비약으로 인기가 높은 조선무약 '솔표우황청심원액(50㎖)'은 완도에서 800원에 살 수 있는 반면, 목포나 함평에서는 6.3배가 넘는 5천원이었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8년 상반기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전국 조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시·군별 의약품 가격이 많게는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쌍화탕'과 '솔표우황청심원액' 이외에도 위장약으로 인기가 높은 보령제약 '겔포스엠 현탁액'은 곡성에서 1천300원, 담양과 여수에서는 4천원에 팔리고 있었다.

다소 가격이 높은 동국제약의 '인사돌정(100정)'의 경우도 최저 가격(강진 2만원)과 최고 가격(완도 3만5천원)의 차이가 1.8배에 달했다.

유한양행의 '비콤씨정(100정)'은 강진과 신안에서 최저 1만2천원, 최고 2만원에 판매되고 있어 같은 지역에서도 1.7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얀센 '타이레놀 500mg(10정)'과 동국제약 '복합마데카솔연고(10g)'도 광주·전남 시·군·구별로 평균 2~3.5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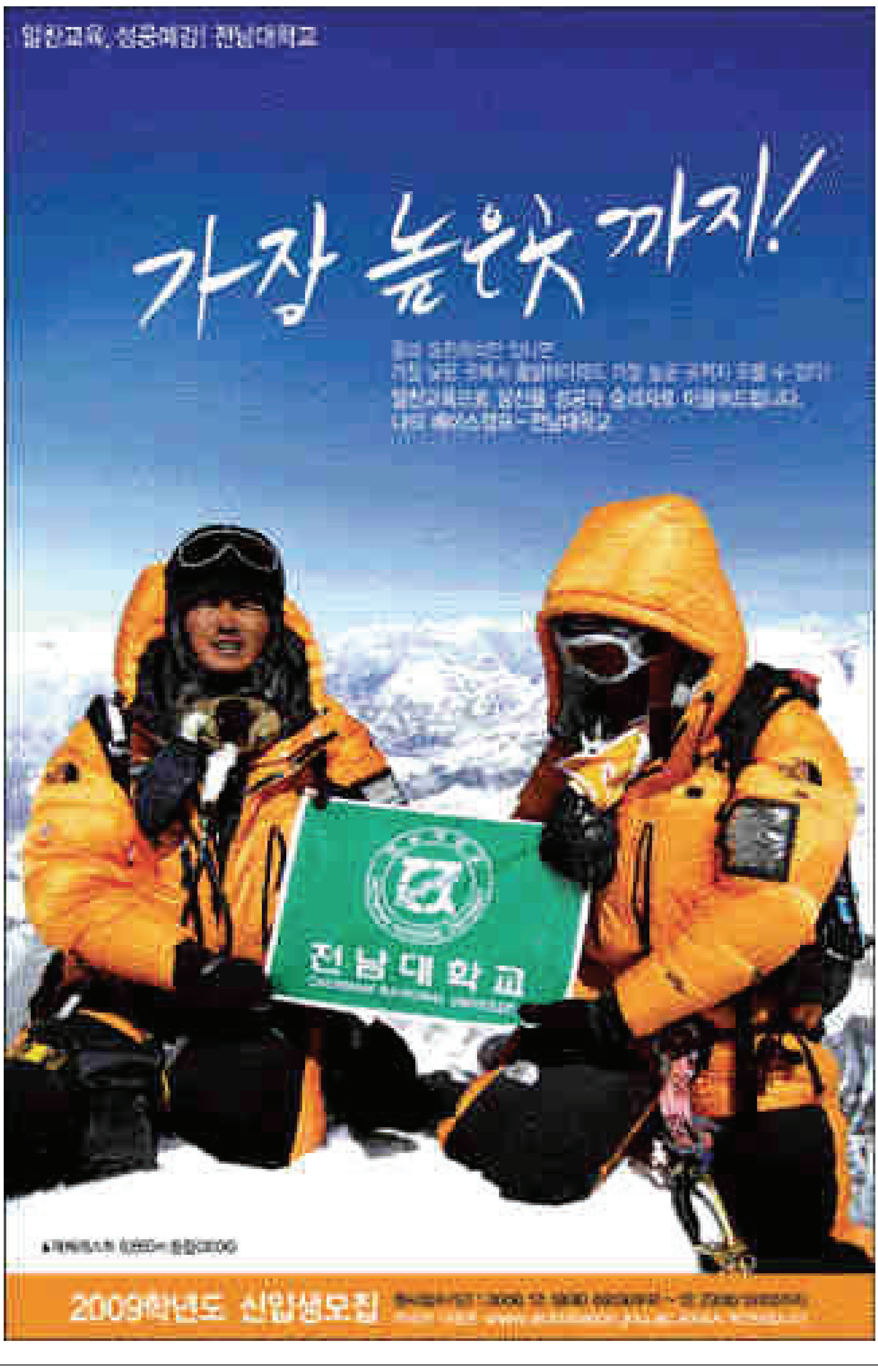
지역별·약국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도입 10년째가 되는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공정한 가격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지만, 지역별 평균 가격조사와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과도한 저가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경쟁이 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약국이 밀집된 신도심과 대형병원 인근은 대표적인 강장제와 소화제, 드링크제 등 소위 미끼 상품으로 가격을 낮춰 손님들을 유치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가 많은 지역은 판매량이 늘고, 약값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약국이 거의 없는 시골지역의 경우는 교통비와 물류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값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에 협조공문을 보낼 뿐 사실상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약사회 김일룡 회장은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가 시민들에게 불신만 조장하고 있는데도 '정찰 가격제'로의 전환을 왜 주저하는지 모르겠다"며 "가격을 표준화하고 이를 어기는 약국을 강력 단속해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내년 성장 목표 3%

재정부, 신규 일자리는 10만명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공식 목표를 기존 전망치에 비해 1% 포인트 낮은 3% 내외로 내려잡았다.

경상수지는 100억 달러 흑자, 소비자 물가는 3%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신규 일자리는 10만명을 목표로 정했다. 〈관련기사 4·11면〉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경제 전망과 목표를 담은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부는 이전의 각종 경제위기를 분석했을 때 실물경제가 침체를 거쳐 회복되는 시점까지는 3~4년 정도가 소요됐지만 경기 회복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한 위기 극복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면 예상보다 빨리 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경제 여건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데다 경제위기가 실물로 전이, 성장이 둔화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내년 성장률은 3% 내외에 머물고 오는 2010년 성장률은 4%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올해 6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이에 비해 개선된 100억 달러 내외 흑자가 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소비자물가는 올해가 4.7%, 내년은 3% 내외, 2010년은 2% 후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일자리 전망의 경우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내년 일자리 전망 4만명 수준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도 목표치는 10만명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방세제도 개편, 지자체가 간판세나 온천수세 등의 지방세 세목을 자율적으로 신설하고 구체적인 세율 수준도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온천이 유명한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온천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내년이 아마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내년 상반기가 가장 힘든 기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새해에는 세워놓은 (경제운용) 계획을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과제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모든 경제주체들이 용기를 갖고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생계형 범죄' 벌금 절반 낮춘다

서민생활 안정 대책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춰 구형하고 일제 단속도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나이 어린 네티즌을 상대로 한 저작권법 관련 '묻지마 고소'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서민의 생계형 범죄에 한해 통상적인 벌금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구형하고 기소유예 처분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벌금을 완납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나눠내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도 지양할 방침이다.

법무부 차동민 검찰국장은 "서민은 검찰 집행 사무규칙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부양자가 없는 자, 불의의 재난을 당한 자, 1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자 등이 될 것"이라며 "이를 원용해 폭넓게 감액 구형 대상자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